



주간 통일정세

2012-3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은, 아리랑 공연 관람(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공연을 관람한 김 제1위원장은 "아리랑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해 새 맛이 나게 훌륭히 재형상했다"고 만족을 표하고 출연자와 창작가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통신이 밝힘.

- **北 최영림 총리, 나선·회령 현지 점검(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함경북도 회령시와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최 총리는 회령시를 방문해 시의 발전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자재공급 및 식생활과 관련한 공장, 기업들을 둘러본 뒤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駐스웨덴 대사에 박광철 임명(9/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박광철을 스웨덴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또한 전임자인 리희철 대사가 스웨덴에 주재하면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8개국 대사를 겸임한 점으로 미뤄 박 신임 대사 역시 이들 지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리설주=김정숙' 이미지 만들기(9/2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친인 김정숙을 찬양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1면 머릿기사로 올해 4천200 여개 단체, 45만 여명이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의 김정숙 동상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 매체는 지난 17일부터 김정숙에 관한 선전에 열을 올림.
 -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다심한 손길은 군인들의 식생활에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해방 후 사회 복구에 전념하던 때 김정숙이 한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의 식사를 챙겼다고 소개함.



- **北김정은, 채소·화초 재배시설 현지지도(9/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남새(채소)과학연구소와 평양 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아 영양분공급실, 컴퓨터제어실, 생물공학실, 연구실 등을 둘러보고 나서 채소는 종합비타민과 같으며 "풍토에 맞으면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우량품종을 많이 생산해 주민에게 공급하라"고 지시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아 생산능력이 이전보다 20여 배 늘어난 점을 언급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꽃씨를 들여오고 다른 나라의 선진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화초연구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룡하·박태성·김병호·박춘홍 당 부부장이 동행함.

- **北 '어머니날' 제정...여심잡기?(9/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이 제정된 것만큼 꽃을 사다가 어머니나 아내에게 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은 '어머니의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의 사망일인 22일에 즈음한 날일 것으로 관측됨.

■ **김정은동향**

- 9/18, 김정은 黨 제1비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무연탄 가스화공사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9.18,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남포시, '종합적 연안관리체계 확립' 보도(9.17,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함경북도 회령시의 공장·기업소 등과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방문하여 '요해사업' 진행(9.17, 중통·중방)
 - 방문지 : 김정숙교원대학, 중봉탄광, 나선경제무역지대 등
- 고려성군관 새 교사 준공식, 9.19 최영림(총리)·최태복(黨 비서)·김승두(교육총 위원장)·박태덕(黃北道黨 책임비서)·강영수(黃北道 인민총 위원장)·김영일(개성시黨 책임비서) 등 참석下 진행(9.19, 중통·평방)
- 김정일애국주의 실천을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9.20 김기남(黨비서)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9.20, 중통·중방)
- 김정숙 사망(9.22) 63돌 계기 △ 김영남·최영림·최룡해 등 당과 국가·군대 간부 등, 9.22 대성산혁명열사능에 헌화 △ 전국 각지 김정숙 동상에 인민군 등 꽃바구니 진정(9.22, 중통·중방)

나. 경제

● 北총리, 주요공장에 생산량 확대 주문(9/20,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내각총리가 최근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들을 연속 방문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생산량을 크게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최 총리가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점검하고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생산량을 더욱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전역서 일제 승용차·버스 폐기(9/18,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일본산 자동차를 회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 북한 전역에서 일본산 승용차와 버스가 거의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이 방송은 최근 3개월간 중국에 나온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북한에는 일본산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北 경공업大 '고려성군관' 새 교사 준공(9/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경공업 분야 종합대학인 고려성군관의 새 교사 준공식이 1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통신은 새 교사는 본 교사와 세 개의 부속건물로 구성됐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종합강의실, 교실, 실험실, 강좌실, 문화후생시설 등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학생들의 학과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



취졌다"고 전함.

- **北, 옥수수 수확 끝내고 벼수확 돌입(9/22, 민주조선; 조선중앙방송)**
 - 22일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등에 따르면 황해남도 각 시·군·구의 협동농장들이 최근 세부적인 추수 일정 계획을 세우고 벼 가을걷이에 돌입함.
 - 북한 매체들은 "벼 품종별로 생물학적 특성과 여무는 정도에 맞게 추수 적기를 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만경대구역, 강남·낙랑군, 순안, 역포구역 등 평양시와 주변구역, 군의 협동농장 등이 영농조직을 점검하고 벼 가을걷이를 시작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한 외국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고 선전(9.17, 중통)
- 제13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식, 9.20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9.20, 중통·평방)
 - 양형섭, 김용진(내각부총리), 홍광순(문화상, 개막사), 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日에 '북일 평양선언' 이행 촉구(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7일 북일 평양선언 10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두 나라의 관계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의지가 있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일 평양선언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일 평양선언을 끝까지 이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에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다"고 촉구했으며 "공화국 정부는 조일 평양선언의 이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처음부터 선언의 기본정신을 왜곡·모독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함으로써 선언에 밝혀진 사항들을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를 백지화하는 길로만 나아갔다"고 비난함.
 - 또한, 논평은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선언 이행의 근본인 과거청산의 조항을 뒤집어엮었다며 일본이 핵·미사일·납치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들면서 북일 관계를 선언 채택 이전보다 더한 적대관계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일본의 악랄한 대결정책과 책동으로 조일 평양선언은 마치도 그 누구의 핵·미사일·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인 듯이 심히 왜곡돼 왔으며 그 이행문제는 날로 요원해지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추종해 핵·미사일·납치문제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일 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함.

● **中, 北 북동부 4~5개 항구 공동개발(9/17,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 청진항을 포함해 북한 북동부 항구 4~5곳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17일 북·중 양국의 민간 기업이 선봉, 나진, 청진, 김책, 단천, 흥남,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 북동부지역 항구 가운데 4~5곳에 대해 공동 개발에 나섰음을 중국 관련 당국자로부터 확인했으며, 이 소식통은 "나진항은 이미 북·중 양국의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이 공식화한 곳이고 청진항 공동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임.

● **北, 일본인 성묘객 방북 또 허용(9/18, 교도통신)**

- 북한이 평양 등지에 있는 가족·친척의 묘지를 참배하려는 일본인의 방북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함.
- 이 통신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사는 사토 도모야(佐藤知也, 80)씨 등 일본인 16명이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방북할 예정이며, 북한은 지난달 말에도 일본인 유골 수습을 요구해온 일본 민간단체 '전국청진회(全國靑津會)' 회원들의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힘.

● **北, '센카쿠 영토분쟁' 중국 편들기(9/19,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釣魚島·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밝힘.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가 최근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며 "성명은 일본 정부가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14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한 발언을 소개했음.

● **印尼, 北에 200만 달러어치 식량 지원(9/20, 안타라 통신 등)**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에 2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 등이 20일 보도함.
- 이 통신 등은 아궁 락소노 인도네시아 복지조정장관이 전날 북한의 식량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리정률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에게 200만 달러 규모의 식량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고 전함.



- 락소노 장관은 "지원은 200만 달러 상당의 팜유와 비스킷류, 다른 식품 재료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함.
- **中, 北 나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가속화(9/20,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북한 나선경제특구와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 건설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20일 "나선특구 기반시설 건설에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두만강대교(중국 훈춘~북한 원정리)를 대체할 새로운 교량과 나선특구에 중국의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 건설을 위한 기초 지질탐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힘.
 - 또한, 이 소식통은 "훈춘~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도 이미 양측이 합의하고 설계를 위한 지질탐사를 끝낸 상태"라고 덧붙임.
- **北, '일에 MD용 레이더기지 설치' 계획 비난(9/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최근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MD)시스템 관련 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키로 한 데 대해 20일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적수'답게 보다 강력한 핵보유국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 국방장관이 새로운 레이더 설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라며 "미 군부 당국자가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함.
 - 이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고 미사일대국인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군사력 증강을 다그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임.
- **北, 남포·해주·신의주 특구 추가 계획(9/23, 도쿄신문)**
 - 북한이 남포와 해주, 신의주 등 3곳을 경제특구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익명의 북중 소식통과 한국 연구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방중시 남포 등 3곳을 경제특구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함.
- **北, 중국과 '재난구조 품앗이' 강조(9/23,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조중(북중)친선의 화원 속에 꽃피난 또 하나의 감동깊은 소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바다에서 조난당한 어선이 중국 선박에 구조된 소식을 자세히 소개함.
 - 노동신문에 따르면 함경남도 단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북한 어선이 갑작스런 고장으로 세찬 바람과 파도에 표류하면서 침몰할 위기에 놓였으



나 중국 산둥성의 성양(청양)어업공사 소속 '민하이호'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북한 어선을 발견하고 수시간에 걸쳐 선원 3명을 무사히 구조한 뒤 다음 날 오전 함경북도 나선 앞바다에 도착함.

- 노동신문은 "중국 선원들의 소행은 조중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과 손길 아래 친선의 유대를 두터이 하는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된 고상한 도덕 의리심의 발현"이라고 평가함.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日 평양선언 채택' 10주년('02.9.17)을 맞으며 '日 당국자들이 관계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의지가 있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평양선언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9.17, 중통/조일관계개선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
- 美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 강경정책 발표 관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와 핵위협제거에 달려 있다'고 주장(9.17, 중통·노동신문·대조선강경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
- 舊 소련시절 '北이 러시아에 진 빚 조정에 관한 북·러 정부간 협정', 9.17 모스크바에서 조인(9.18, 중통)
 - 北 '기광호' 재정성 부상과 러시아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재정성 부상이 서명
 - 협정 체결로 양국간 경제적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마련됨
- [北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 美 국방장관의 日 남부지역에 새로운 레이더기지 설치 발표 관련 '지역미사일방위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라며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뿐'이라고 비난(9.20, 중통·중방)
- 北 대표단(단장 : 박길연 외무성 부상), 9.20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9.20, 중통·중방)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9.13 중국 청년친선 대표단과 담화(9.13, 중통)

3. 대남정세

● 대북 수해지원 밀가루 500t 육로 전달(종합)(9/21,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밀가루를 직접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서 대북 수해지원용 밀가루 500t 전달을 위한 환송식을 열었음.



- 이날 25t 트럭 20대에 실려 전달되는 밀가루는 오전 10시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지나 북한의 개성 봉동역에 하역된 후 울여름 수해가 가장 심했던 평안남도 안주시와 개천시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임.

● **北 매체, 안철수 대선 출마 첫 보도(9/21, 우리민족끼리TV)**

- 북한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가 2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함.
- 이 매체는 이날 남한 소식을 보도 형식으로 정리한 동영상을 게재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남조선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소개함.
- 또한, 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다" 등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음.

● **北어선 서해NLL 또 침범..軍경고사격에 퇴각(종합)(9/21, 연합뉴스)**

- 북한 어선이 21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어선 6척이 오전 11시44분부터 연평도 서북방 NLL을 0.5~0.7노티컬마일(0.9~1.2km) 정도 순차적으로 침범했다"면서 "이에 해군 고속정 2척을 오후 3시부터 NLL 인근으로 고속 기동시켜 각각 2회에 걸쳐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 어선은 오후 4시에 모두 퇴각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고통신만 했는데 NLL 월선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이번에는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조치했다"며 "고속정이 보유한 별컨포(20mm) 수십 발을 북한 어선이 인지할 수 있는 해상에 발사했다"고 설명했으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고 해안포도 개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북한군 경비정은 황해도 연안에서 기동 중이었으나 NLL 부근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 **北 "南, 다른 나라 어선에 총질"(종합)(9/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우리 군이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가한 것에 대해 22일 "북방한계선"을 마치 우리 어선들이 넘은 것처럼 거짓과 억지주장을 꾸며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를 통해 "21일 하루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술한 괴뢰해군 쾌속정이 연평도 서남쪽 해상경계선 우리측 영해 깊이 기어들어 총포탄을 쏘아대는 난동을 부렸다"며 "상대가 평화적인 민간 어선이 분명하다고 제놈들 입으로 뉘치면서도 거기에 대고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살인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함.
- 또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우리 어선이 아닌 다른 나라 어선의 무질서한 어로작업을 구실로 감행되고 있다는데 있다"며 "그것도 언제 한 번 인정받은 적 없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마치 우리 어선들이



넘은 것처럼 거짓과 억지주장을 꾸며내 광고하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함.

● **北, 南 서방사 대응 서남전선사령부 창설(9/23, 연합뉴스)**

-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는 지난 9일 남측을 비난하는 '공개보도'를 내놓으면서 그 명칭이 처음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23일 "북한의 서남전선사령부라는 명칭이 최근에 처음 등장했다"면서 "이 사령부는 황해도에 있는 4군단사령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며 "북한은 작년 6월15일 출범한 우리의 서방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전선사령부를 창설한 것 같다"고 말함.

● **北 "南정부, 안보문제 부각해 재집권 기도"(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3일 우리 군이 이틀 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어선들에 경고사격을 한 것이 남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연일 비난했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 패당이 이번에 최대 열점지역인 서해군사경계선 일대에서 감행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은 어떻게 하나 전쟁의 불집을 터뜨려 파멸의 위기에 서 출로를 찾고 살구멍을 열어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모략"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이어 "그것은 지난 연평도 포격전에서 당한 참패와 수치를 만회하며 안보문제를 부각시켜 민주개혁세력에 쏘리는 민심을 차단하고 괴뢰 대통령 선거 정세를 보수패당의 재집권에 유리하게 몰아가 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다음주 중국서 '미니 6자회담' 열린다(9/19, 연합뉴스)

- 중국에서 다음 주 개최되는 동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사실상 '약식 북핵 6자회담'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회의 주제가 북핵 문제를 의미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로 정해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 각국의 6자회담 차석 대표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한 외교 소식통은 19일 "NEACD가 올해는 오는 27~2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이라면서 "회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라고 말함. NEACD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부 및 국방부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매년 진행하는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의 다자간 안보 대화체임. 기본적으로는 학술적인 성격의 비공식적 포럼이지만 정부에서는 주로 6자회담 차석 대표급이 회의에 참여해왔음. 특히 이번에는 주제가 사실상 북핵 문제로 잡히는데다가 2010년과 지난해 회의에 잇따라 불참한 북한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식 6자 회담 성격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임.
- 우리 정부도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도훈 북핵외교기획단장을 NEACD에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이 회의에는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해 왔지만 이번에는 북핵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에서 참석자를 변경함. 북측에서는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큼. 중국에서 열리는 데다가 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는 핵심 인사를 북한이 안 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임. 미국에서는 클리퍼드 하트 국무부 대북특사가 참석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 일본, 러시아도 6자회담 차석 대표급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6자회담 차석대표들이 NEACD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다면 이는 2009년 미국에서 열린 NEACD 회의 이후 처음임.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냉각된 분위기가 자리에서 대화 모멘텀이 마련되긴 쉽지 않겠지만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포함해 회담 재개 등의 문제에 대한 6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됨.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미, 남·북간의 장외 접촉 여부도 주목됨. 주최 측 역시 두 개의 세션 중 한 세션은 각국 정부 대표만 주제발표를 하고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표만 참여하는 별도 오찬 일정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짐.



● 다음 주 중국서 '미니 6자회담' 열린다(9/22, 로이터 통신)

- 국제원자력기구는 금요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즉시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평양의 국제적인 고립을 전제하고 있음. 결의안의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인 155개 국가의 전체회의를 통한 투표결과 없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북한에게 더 이상 새로운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함.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힘. IAEA측은 또한 북한은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 조직된 1970년의 핵비확산조약(NPT)에 의거 "핵보유국"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함.
- 북한은 전기 생산 때문에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들의 핵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핵기술을 시리아, 리비아, 아마도 미얀마와 파키스탄과 거래해왔음. 더불어 2006년과 2009년의 올해 초에 폭파실험을 강행한 이후 세 번째 핵실험을 추진하려 했다고 알려짐. 북한은 2003년에 처음으로 NPT에서 탈퇴한 국가이며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 하에 실시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후, 2월에 첫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IAEA의 접근을 거부해오고 있음.
- 미국 특사인 로버트 우드씨는 IAEA결의안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함. "북한은 당장 모드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우드씨는 의회에서 언급함. "북한은 핵 활동 모니터와 핵실험 중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 IAEA의 북한 주재를 허락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美전문가들 대북수해 지원 찬반 엇갈려>(9/18, 연합뉴스)

- 대북 수해지원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함.
-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이 방송에 곤경에 처한 나라에 대한 원조는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 지원을 촉구함.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지원은 늘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문은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과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분배감시(모니터링)를 조건으로 대북 지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 반면 스테판 해저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미국이 이미 북한에 식량을 충분히 지원했다며 미국이 '2·29합의'에서 대북 지원을 핵 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실수라고 지적함. 지난 2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고 미국은 24만톤의 식량(영양)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



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에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임. 2006년부터 2년 반 가량 북한주재 영국대사를 존 에버라드 유엔 지문관도 북한이 쌀과 시멘트 등의 품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의 지원 제안도 무시당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미 국무부는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지원 대상국의 수요와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분배 투명성 원칙 등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임.

● 美 킹 특사 22일 방한..北인권 협의(9/21,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2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내고 "킹 특사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킹 특사는 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북한 전문가들도 만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인권은 미국의 최우선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함.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방한은 북한 관련국을 돌아보는 '필드 트립(현장 순방)' 차원으로 안다"고 말함. 지난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 성안을 주도했던 그는 2009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됐으며 미국 내 탈북자 정착 및 북한인권법,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킹 특사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앞서 킹 특사는 지난 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홍수 피해실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中, 北 북동부 4~5개 항구 공동개발"(9/17,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 청진항을 포함해 북한 북동부 항구 4~5곳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함.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17일 북·중 양국의 민간 기업이 선봉, 나진, 청진, 김책, 단천, 홍남,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 북동부지역 항구 가운데 4~5곳에 대해 공동 개발에 나섰음을 중국 관련 당국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함. 이 소식통은 "나진항은 이미 북·중 양국의 경제특구로 공동개발이 공식화한 곳이고 청진항 공동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임. 북한 북동부 지역에서 나진항 이외에 북·중이 공동으로 항구 개발에 나선 사실이 중국 당국자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임.



- 앞서 중국 연변일보는 최근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시 소재 민영기업인 엔벤티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이 지난 1일 평양에서 북한항만총회사와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고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700만인 청진항 3·4호 부두를 양국의 해당 기업이 30년간 공동 관리·이용한다는 게 계약의 골자임.
- 지난 2008년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소재 창리(創立)그룹은 2008년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바 있음.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측이 나진항 4·5·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도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 일본인 성묘객 방북 또 허용"(9/18,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등지에 있는 가족·친척의 묘지를 참배하려는 일본인의 방북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음.
-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사는 사토 도모야(佐藤知也, 80)씨 등 일본인 16명이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방북할 예정임. 이들은 태평양전쟁 전후에 평양 등지에서 숨진 뒤 평양 '용산묘지'에 묻힌 일본인들의 유족임. 이들은 방북 시 용산묘지 이전 예정지를 살펴볼 예정임. 사토씨는 "60여 년간 북한에 잠들어 있는 유골 앞에 우선 향이라도 피워 드리고 싶다"고 말함.
- 북한은 지난달 말에도 일본인 유골 수습을 요구해온 일본 민간단체 '전국 청진회(全國靑津會)' 회원들의 방북을 허용함. 북한은 일본인 유골 문제를 '인도적인 문제'로 규정, 최근 북일 정부 간 대화에서도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北·日, 2002년에 114억 달러 보상 밀약"(9/18,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10년 전 '평양선언' 때 114억 달러의 전후 보상 밀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조선노동당 전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2002년 평양에서 북한의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서명한 평화선언의 배경에는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경제협력 자금 114억 달러(현 환율로 약 12조7천억 원)를 전후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부상했다고 전함. 김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관련 현안사항(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조치,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일 평화선언'에 합의함.
-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교섭 당시의 기록 일부가 누락돼 협상 당시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함. 북한과 일본의 전후 보상 밀약설은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출신으로 탈북자인 장철현 씨(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가 지난 2008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1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처음 제기됨. 신문에 따르면 "북일 평화선언 직후 '중앙당 특별 강연 자료', '외무성 실무회담 성과·경험자료' 등을 열람했다는 장 씨는 중앙당 강연 자료에 '일본이 114억 달러를 약속했다'는 표현이 있었으며 '일본 측은 전쟁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국이 다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 배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말함.

- 또 북한 외무성 자료에는 "일본이 국교정상화의 대가로 자금을 내겠다고 제안했고 북한은 300억~4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기록돼 있었고 장 씨는 설명함. 북한은 당시 배상 요구액의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식민지 시대 일본이 몰수한 북한의 재산과 이에 대한이자 등을 거론함.
- 이에 대해 일본은 ▲위안부는 스스로 돈벌이를 위해 일한 것이고 ▲징용자의 임금은 지불했으며 ▲북한이 몰수 재산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일본은 자국이 건설한 수풍댐과 무산 철광산, 흥남연합기업소 등을 사용한 사용료를 북한에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 하지만 북-일 정상의 평화선언과 합의 내용은 이후 양측의 협의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음.

● 北, '일에 MD용 레이더기지 설치' 계획 비난(9/20,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최근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명분으로 미사일방어(MD)시스템 관련 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키로 한 데 대해 20일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적수'답게 보다 강력한 핵보유국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 국방장관이 새로운 레이더 설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라며 "미 군부 당국자가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발함. 이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고 미사일대국인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군사력 증강을 다그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일본에 새로운 레이더 기지를 설치키로 한 것은 지역미사일방위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서 명백히 유라시아의 큰 나라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지역정세를 긴장키시고 군비경쟁을 촉진하게 될 뿐"이라며 "미사일방위체계로 그 무엇을 요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망상"이라고 비난함.
-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일본을 방문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해 미일 양국이 일본에



두 번째 탄도 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마. 러·북 관계

● 북-러, 채무탕감 위한 정부 협정 체결(9/18,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 정부는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을 탕감하는 채무조정에 관한 협정을 17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함.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공화국(북한)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이전 소련시기에 제공된 차관으로 공화국이 러시아에 진 빚 조정에 관한 협정이 17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됐다"며 "빚 조정에 관한 북-러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된 것은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마련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북한 측에서 기광호 재정성 부상,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재무차관이 협정문에 서명함.
- 중앙통신은 이날 협정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음. 그러나 앞서 지난 6월 러시아는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 원)의 채무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스토르차크 재무차관은 지난 6월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채무탕감 내용을 담은 북-러 정부 간 협정서가 곧 내각 심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스토르차크 차관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부처 간 의정서에 서명함. 이후 양국 내각의 심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된 것임.

바. 기 타

● <北, 서해 NLL 도발 명분 쌓나>(9/21, 연합뉴스)

- 북한 어선들이 9월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잇따라 침범해 군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음. 군은 지난 12일 7척씩 무리를 지어 2차례 NLL을 침범했을 때는 '단순 침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3차례 더 침범 행위를 반복하자 의도성이 짙다는 분석을 내림. 북한 어선은 지난 14일 13차례, 15일 8차례, 20일 2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한 것으로 관측됨.
- 이들 어선은 우리 해군의 여러 차례 경고통신에도 오전 또는 오후 내내 버티기를 계속하다가 퇴각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전함. 군 당국은 어선들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북한군이 어선을 내세워 도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남측 해군이 NLL을 넘은 북한 어선들을 나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이를 발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실제 북한 해안포부대는 지난 12일 어선 7척씩 2차례 무리지어 NLL을



- 월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거리를 확장시킨 일부 해안포의 포구를 개방한 것으로 알려짐. 우리 해군이 북한 어선들을 나포하거나 경고사격을 가하면 즉각 포격할 수 있는 상태의 도발 태세를 유지한 것임. 북한은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서해안에 사거리 12km의 76.2mm 해안포를, 내륙 지역에 사거리 20km의 122mm 방사포 등을 밀집 배치해 놓고 있음.
-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어선들의 NLL 접근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북측 연안 경비에 주력하고 사실상 NLL을 월선했던 어선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다른 관계자는 "이번 달에만 벌써 4차례 NLL을 침범한 행위는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선의 NLL 침범을 내세워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대선을 앞둔 남측 사회를 교란할 목적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분석함.
 -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응해 NLL 이남에 초계 함정을 증강하고 육상의 포병 화력 즉각 대응태세 유지와 전투기 초계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경계태세에 들어감. 군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으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한군이 해안포의 포구를 수시로 개방하는 등의 도발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함. 다른 관계자는 "북한군이 NLL 월선을 빌미로 도발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분히 주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 어선의 NLL 침범과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미사일협상 곧 결론내릴 듯..김태효 訪美"(9/17,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쟁점 현안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만간 결론짓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양국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미사일 협상'을 가급적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난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함. 국방부 최종일 정보본부장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고위 외교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 쟁점이 정리되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함.
 - 한국 정부는 현재 사거리 300km, 무게 500kg으로 제한된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모두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임. 미국 측은 쟁점인 탄도미사일 사거리의 경우 최소 800km에서 최대1천 km까지 늘리자는 한국의 요구에 '상당한 이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탄두



중량에 있어서도 800kg 정도까지 '대폭 올리자'는 한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국제적인 비확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 미국 정부는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의 일원으로 미국과 미사일방어(MD)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을 통해 "탄도미사일 확산에 따른 위협으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호주와 탄도미사일방어(BMD)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음.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현재 대학교수 신분인 김태효 전 기획관의 방미는 미사일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이상우 교수나 박용욱 전 국방부 차관 등과 함께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국방대학교(NDU) 소속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하고 지난주 말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있을 당시 한미 미사일 협상을 주도한 김태효 교수가 협상의 진전을 위한 '측면지원' 활동을 벌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음. 이 소식통은 "김태효 전 기획관이 과거 카운트파트너로 일한 백악관 당국자 등을 만났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만일 만났더라도 이는 사적인 만남일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최종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경우도 대북정보 교류 등을 위해 연례적인 협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함.
- 한미 양국은 '미사일 협상'을 조기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 하에 이르면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 하지만 양국 모두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목표가 실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임성남 방미.. "북한·북핵문제 협의"(9/18, 연합뉴스)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18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함.
- 임 본부장은 출국 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핵과 관련된 그동안의 상황을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임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한 바 있음. 임 본부장은 20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국무부 당국자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임. 또 미국 학계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로버트 킹 美 인권특사 방한.. 대북지원 협의(9/22,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22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 킹 특사의 방한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임. 이날 오후 늦게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킹 특사는 외교통상부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다루는 김수권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만찬을 하며 북한 인권 상황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임.
- 킹 특사는 24일과 25일 외교부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통일부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등을 각각 면담함. 통일부 관계자는 "킹 특사가 만나자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북한 인권이나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수혜 지원 제의 거부 등 최근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함. 킹 특사는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북한 전문가들도 만나 북한인권 실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 성안을 주도했던 킹 특사는 2009년 북한인권 특사로 임명됐으며 미국 내 탈북자 정착 및 북한인권법,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킹 특사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임. 정부 당국자는 "대북 지원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방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미국은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고 지원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北전역 도달”.. 미사일 사거리 배 이상 증가>(9/23, 연합뉴스)

-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 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kg을 유지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짐. 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은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함. 그러나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짐.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각각 800km와 500kg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실무선상에서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정부 당국자도 "현재 미국 측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전함. 이대로 합의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km)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됨. 800km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임.
-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국 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km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짐.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kg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됨. 탄두 중량 500kg 기준은 1979년 미사일 지침이 처음 채택됐을 때 포함됐던 사항으로 2001년 지침 개정 시에도 바뀌지 않았음. 미사일지침은 기준인 800km와 500kg을 놓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서로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짐. 이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 모두 기준보다 늘어날 수 있음. 즉 사거리를 기준점인 800km보다 줄일 경우 500kg보다 더 무거운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됨. 반대로 탄두 중량을 더 줄일 경우 800km 이상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음. 구체적인 트레이드 오프 비율을 두고 한미 양국 간 세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관측됨. UAV의 경우 기존에는 탄두 중량으로 규제했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기준을 만들.
-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무장 전 무게가 2천300kg인데 우리 정부도 이런 수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1천~2천kg 안팎에서 협의를 진행된 것으로 관측됨. 그러나 로켓의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민간 로켓 개발 시에도 사용하는 문제는 새 미사일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는 다음 달 하순 이전에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

나. 한·중 관계

● 中 우한서 한·중 경제문화 교류행사(9/19,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중국 중부 허브 도시인 우한(武漢)에서 양국 교류행사가 열림.
-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후베이(湖北)성 정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우한시에서 양국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한·중 경제문화 교류행사'를 개최함. 한국 측에서는 이수성 전 총리, 이규형 주중 대사와 기업인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홍중(李鴻忠) 후베이성 서기와 왕귀성(王國生) 성장을 비롯한 후베이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함.
- 농수산식품전과 관광사진전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한중 문화 공연, 한중 지방 정부·경제 교류회의, 한중 전문가 세미나 등으로 진행됨. 양국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우한개발특구 등도 시찰할 예정임.

다. 한·일 관계

● 일본인들 태극기 모독 동영상...누리꾼 '충격'(9/19, 연합뉴스)

- 인터넷에 일본인들이 태극기를 모독하는 동영상이 연달아 올라와 충격



을 주고 있음. '웍시 바퀴벌레 매트'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사과에 바퀴벌레 모양을 그려 넣은 태극기를 길바닥에 놓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밟는 모습이 담겨 있음.

- 이 영상은 지난 7월말 일본의 한 극우단체가 한국과의 국교단절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던 중 벌인 퍼포먼스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짐. 유튜브에는 철모에 군복을 입은 남성이 태극기 모양을 그린 천을 밟다가 찢는 동영상과 복면을 쓴 남자가 '멸한(滅韓)'이라고 적은 태극기를 벽에 걸어 놓고 발로 차다 불태우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음.

● 제67차 유엔총회 개막..韓, 과거사 거론 주목(9/19, 연합뉴스)

-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진출 여부가 결정될 제67차 유엔 총회가 18일 오후 3시(이하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개막됨.
- 세르비아의 전 외무장관인 부크 예레미치 의장이 주재하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85개국 정상과 45개국 부통령과 행정수반, 6개국 부총리, 56개국 장관급 수석대표 등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개발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안보리 재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서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북한에서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차관급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총회는 앞으로 일주일간 신입장위원회 등 운영 관련 회의를 열어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25일부터 일주일간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이 진행됨. 기조연설 세션이 끝나면 군축(1위원회)과 인권(3위원회)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위원회별 회의가 2개월 가까이 진행됨.
- 김 장관은 28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15분간의 기조연설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발언 수위와 내용은 김 장관에 앞서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발언을 보고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됨. 노다 총리가 연설에서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공세에 나설 경우 중국 측의 거센 반발도 예상됨. 이 경우 유엔 총회가 한·중·일 3국이 영토와 역사문제를 놓고 펼치는 첨예한 외교전 무대가 될 가능성도 점쳐짐.
- 이번 총회에는 무력분쟁 방지와 군축 및 핵 비확산, 북한·이란·시리아 등에 대한 인권 결의, 중동과 팔레스타인 문제, '리우+20' 정상회의 후속조치 등 총 168개 의제가 올라 있음. 우리 정부는 지난 1995~1996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5 임기)을 맡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한 변수가 돌출되지 않는 한 무난한 당선이 기대됨. 현재 아시아 그룹의 1개 공석을 놓고 캄보디아, 부탄과 경쟁 중인 한국은 당선에 필요(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인 129표)한 표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이탈 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지역 그룹 별로 총 5개의 비상임 이사국을 뽑는 선거는 총회 개막일 한 달 뒤인 10월18일 실시될 예정임.



- 우리 정부는 11월12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선거에도 모두 입후보했으며 현재 경합 중인 국가는 없는 상태임.

라. 미·중 관계

● 美中, 아덴만서 첫 해적퇴치 합동훈련(9/18,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해군이 17일 아덴만 일대에서 첫 해적퇴치 합동훈련을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함. 합동훈련은 미중 양국의 구축함과 호위함이 참가한 가운데 5시간가량 진행됨.
- 중국 측은 "양군 간에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안보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의했다"고 평가함. 미중 해군이 그동안 수색·구조 분야 합동훈련은 해왔으나 해적퇴치 훈련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중국은 2008년부터 아덴만에서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음.
- 앞서 지난 4일 미국 하와이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중국 해양감시선이 해상 교통안전과 구조 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 美 "자제하라"-中 "편들지 마라" 신경전(9/18, 연합뉴스)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18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갖고 센카쿠(중국명 дя오위다오)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재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함.
- 특히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일 상호 협력과 안전보장조약(신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дя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дя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 편에 서지 말 것을 공개 촉구한 것임.
-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량 부장은 패네타 장관에게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센카쿠가 포함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면서 미국에 불개입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함. 신안보조약은 5조에서 "미국·일본 양국은 일본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고 돼있음. 중국과 일본 간 дя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경우 미국도 중국과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근거임.
- 패네타 장관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신화통신 등은 전하지 않았음.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дя오위다오를 신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공동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하는 발언을 해왔음. 미중 양국이 дя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дя오위다오 사태의 향후 추이와 미국의 역할 등이 주목됨.
- 량 부장은 "дя오위다오가 법적, 역사적으로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이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일본의 불법적인 댜오위다오 구매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량 부장은 이어 "우리는 댜오위다오 사태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권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경고함.

- 이에 대해 패네타 장관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냉정과 자제를 요청함. 패네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은 관련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그들이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이 분쟁들을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독려한다"고 말함. '추가조치'를 경고한 량 부장도 "우리는 이 문제가 평화적인 방식과 협상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패네타 장관과 량 부장은 미중 간 군사 협력 및 상호 신뢰 증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함. 특히 패네타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배치는 "결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면서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긴밀한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량 부장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힘. 량 부장은 또 사이버 전쟁,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 문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미군의 아시아 지역 군사력 재배치 등에 대해서도 패네타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그는 떠오르는 세력인 중국과 기존 강대국인 미국이 새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패네타 장관에게 평등,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 새로운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제의함.
- 올해초 량 부장의 방미에 대한 답방으로 전날밤 베이징에 도착한 패네타 장관은 이날 공식 회담에 앞서 량 부장과 회의실 문을 닫고 밀담을 나눴던 눈길을 끌었음. 패네타 장관은 량 부장과의 회담이 끝난 뒤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19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과 회동함.

● 외교부, 패네타 미국방장관 중국 방문에 대해(9/18, 인민일보)

- 2012년 9월 17일,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연례브리핑을 가짐. 기사는 "중국 방문에 막 돌입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전 미국 국방부 소속 관리가 <미일안보조약>에 댜오위다오를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는데, 중국 측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라고 질문함. 이에 홍대변인은 "중국은 '미일안보조약'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미국 측이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길 희망한다.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중국을 포함한 제3자 측의 이익을 해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힘.



- 중국정부 시위대의 미국대사관차량 공격에 대해 조사 착수 (9/20, CNN)
 - 베이징 거리에서 성난 수십 명의 군중들이 미국대사 개리 로크의 차를 둘러싸고 시위를 함. 성난 군중들 일부는 차로 물체를 던지기도 했으며 공안이 와서 이를 제지해야만 함. 중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함.
 - 미국 정부는 지난 주 리비아에서 살해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외교관의 살해에 이은 화요일에 일어난 이 소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로크의 검은색 캐딜락에 대한 공격은 반일본 시위대가 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로 불리는 분쟁지역의 섬에 대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수개의 중국의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던 도중 발생함.

마. 미·일 관계

- 美日, 일본 내 MD용 레이더 추가 설치 합의(9/17,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명분으로 미사일방어(MD)시스템과 관련된 고성능 레이더를 일본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합의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 17일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일 양국이 일본에 두 번째 탄도 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힘. X밴드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은, 파장 2.5~3.75cm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로 4천km 이내의 탄도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능력이 뛰어난 MD 시스템의 핵심 설비임.
 - 미국은 지난 2006년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시(市)의 항공자위대 샤리키(車力)기지에 X밴드 레이더의 일종인 TPY-2 레이더를 배치했고, 규슈·오키나와·괌 등에 추가 배치를 검토해온 끝에 이번 배치에 합의함. AP통신은 정확한 설치 장소는 미정이지만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남부라고 보도함. 미국은 샤리키 기지 외에 아시아-태평양에서 활약하는 함정에도 비슷한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 남부에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할 경우 이 함정을 전방 전개할 수 있음. 패네타 장관은 이날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레이더 추가 설치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중국은 미일의 MD 시스템이 자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어 레이더 추가 설치 계획에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네타 장관은 이후 방중시 레이더 추가 설치가 중국과 관계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이날 패네타 장관과 회담한 뒤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일본과 미국 간에 (센카쿠 열도가) 미·일 방위조약에 해당한다는 데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전함. 패네타



타 장관은 그러나 기자회견 자리에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일관계가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함. 페네타 장관은 이어 "(미국은) 주권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중립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중일간의) 대립을 우려하며, (양국이) 외교적인 수단으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언급, 겐바 외무상의 설명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보임. 미국은 그동안 "센카쿠 열도는 미·일 방위조약에 해당하긴 하지만 개별 영토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음. 페네타 장관은 또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기지 배치를 앞둔 미군 신형수송기 오스프리에 대해 "일본 방위에서 중요하고, 미일 동맹에서도 차지하는 역할이 있다"며 일본 측의 이해를 구함. 페네타 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11개월 재임 중 이번이 세 번째임.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미국 국제 개발처 아내 (9/19, CNN)

- 러시아는 미국의 국제 개발처를 아꼈음. 미국 정부부처에서 이야기하기를 (러시아가 주장하기를) 개발처가 러시아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함.
- "우리는 최근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미국국제개발처의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라고 빅토리아 놀런드 미 대변인이 이번 주에 전함. "미국은 국제 개발처가 지금껏 러시아에서 20여 년간 해왔던 업적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워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와 스태프들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책임감 있게 완수, 혹은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음.
- 러시아 정부 고위관계자가 말하길 이 부처의 프로그램 중 인권과 선거감시와 같은 일부 러시아의 정보국인 RIA Novoski에 의하면 러시아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언급함. 놀런드는 수요일 브리핑에서 이에 응답하기를 러시아의 주권수호에 관한 이슈는 이번 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수차례 언급되었음. 3월의 선거날 저녁,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당 선연설에서 외부의 영향력을 도려내겠다고 말함. "우리는 어느 국가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도 어느 것도!" 라고 말함. "우리는 러시아의 힘을 강탈하고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려는 정치적 도발과 변화에 대한 욕구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덧붙임. 12월 그는 힐러리 클린턴을 러시아인들에게 그의 통치에 대해 반대하고 거리시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힐난함.
- 놀런드는 수요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보터 건강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참 유감이다." 라고 언급함. "우리는 미국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시민사회에 안의 러시아인들과 지속적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지 구체적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민주적이고 러시아다운 측면에서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함.

사. 중·일 관계

● 中 "일본은 책임을 회피 혹은 덮으려는 태도 버려야"(9/18, 인민일보)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연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덮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하며, 중국 국민 모두는 일본정부의 불법적 '도서 구매'에 대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힘.
- 연례브리핑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6일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정부는 중국 내 연일 이어지는 반일시위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중국정부에 일본기관 및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제지 조치를 마련하길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 측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홍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일본 측에 중국 측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국민들 또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일본 측이 중국 측의 엄정한 입장과 중국인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직시하느냐 또 올바른 태도와 조치를 취하느냐가 앞으로의 사태 발전에 영향을 준다. 이 자리를 빌어, 일본 측에 중국 영유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자리로 돌아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답했음. "아울러,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국제협약이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중 외국대사관 및 인원들을 보호해 왔다. 중국은 중국 민중들이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주장하길 호소하는 바다."라고 덧붙임.

● 中, '日우익단체 댜오위다오 상륙' 입장 표명해(9/18, 인민일보)

- (중국)외교부 사이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일본 우익단체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상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음.
- 기자회견에서 "일본 우익단체 소속 2명이 18일 댜오위다오에 상륙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중국 측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홍대변인은 "일본 우익단체의 불법적인 댜오위다오 상륙은 중국 영유권을 침범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중국은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일본 측이 이같은 우익단체의 행동을 용인한 데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함. "또한 중국은 일본 측이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길 촉구하며, 아울러 중국 측은 관련 대응조치를 보류 중이다."라고 덧붙임.

● 中·日 관공선 증원 경쟁...센카쿠 대치 심화(9/19,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이 불붙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순시선과 해양감시선 등 관공선을 경쟁적으로 증원하면서 대치 국면이 심화하고 있음.



- 19일 일본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선박의 센카쿠 해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전체 보유 순시선 121척 가운데 절반인 약 50여척을 투입함. 이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중국 해양감시선들이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영해(12해리)에 집단 진입한 것에 대응하려는 조치임. 증원된 순시선 가운데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한 1천급 아소함이 포함됨. 아소함은 원래 무장 공작선 나포 등 준 전투 상황에 투입되는 함정임.
-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중국어선 1천척이 센카쿠로 향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경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함. 중국은 이미 자국 어선의 센카쿠 어로를 보호하고 일본 측의 저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해감총대 소속 해양감시선 10척과 농업부 산하 어정선(어업관리선) 2척 등 12척 관공선을 배치함.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 직후 관공선 6척을 투입했는데 전력을 배로 늘린 것임. 중국은 해감총대 산하에 400여척의 해양감시선과 농업부 어정국 산하에 140여척의 어정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관공선을 보유한 중국은 순시선 증원 조치에 대응해 해감선과 어정선을 증원할 가능성이 커짐.
- 여기에다 일본이 중국 어선의 센카쿠 영해 진입으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 함정을 센카쿠 열도에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토록 했고, 중국 군부도 경고음을 내고 있어 최악의 경우 양국이 무력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옴. 특히 중국이 공격형 핵잠수함을 자국 어선단 후위에 배치했다는 소문도 인터넷 등에서 나돌고 있음.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전날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 자리에서 "우리는 다오위다오 사태의 항쟁을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권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경고함.
- 이런 가운데 휴어기가 풀린 중국 어선들이 대거 센카쿠 해역에 도착해 조업을 시작함.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어선 수백 척은 18일 밤늦은 시간 센카쿠 해역에 도착, 어로에 들어감. 다만 아직 중국 어선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밖에서 조업하고 있음. 센카쿠 해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저장성, 푸젠성 일대에서 1천여 척에 달함.
- 한편 중일 양국의 정면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속에서 일본 정부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센카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수 있다는 입장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8일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외무상도 포함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대화 채널을 보다 넓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해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중국과 사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힘. 그러나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센카쿠 국유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국이 일본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미지수임.

● 中, 日경찰 대규모 센카쿠 상륙 항의(9/23,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일본 경찰의 대규모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상륙에 항의함.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회에서 "여러 명의 일본 인원이 대만 댜오위다오 보호 활동가들의 접근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것은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함.

- 홍 대변인은 "이에 중국 정부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일본에 강렬한 항의를 전달했다"며 "일본은 반드시 중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함. 아울러 홍 대변인은 "중국은 댜오위다오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조치를 하나갈 것"이라고 경고함.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 및 오키나와 경찰 수십 명은 21일 센카쿠 점속수역에 접근한 대만 선박 '다한(大瀾) 711호'의 상륙에 대비해 폭동 진압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센카쿠 열도의 우오쓰리섬(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대기함.

아. 일·러 관계

● "러, 전후 시베리아 억류자 자료 대량 보관 중"(9/23, 연합뉴스)

-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소련 시베리아 지역에 억류됐던 일본인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남. 조선인 억류 피해자 관련 자료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음.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국립군사공문서관은 최근 시베리아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로 일본인 등을 이송한 수송 부대의 활동기록을 담은 파일 6천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힘. 국립군사공문서관은 이와 별개로 극동이나 시베리아에서 활동한 수송 부대에 관한 문서 파일 약 2천권도 보관 중임.
-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군 관계자는 억류자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한 내무 당국의 자료와 군 노동 부대나 병원에 관한 기록도 존재한다고 밝힘. 러시아는 이 문서를 일본 측에 제공할 방침이며,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팀이 기록 사본을 입수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임. 러시아 측은 21일 밤(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4회 시베리아 억류 문제 러-일 포럼에서도 아이자와 히데유키(相澤英之) 전국강제억류자협회 회장(전 경제기획청 장관)에게 자료 제공 의사를 밝힘.
- 일본 측은 당시 약 5만5천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중 약 1만8천명의 매장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포로로 붙잡힌 일본인은 약 60만 명에 이른다. 조선인 약 1만 명도 포로로 붙잡혔고, 이중 약 2천명은 시베리아에 억류된 채 강제노동 등에 동원됐다가 나중에 귀국함. 한편 일본은 2010년 6월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중 생존자 7만여 명에게 보상금 성격의 특별급부금 25만~150만 엔을 주는 전후 강제억류자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지만, 여기서도 한국과 대만 피해자는 제외함.